

데스크 시국



송기동 편집국장 부국장·문화2부장

꼭 100년 전인 1921년 9월. 경주 시내 봉황대 서편의 한 고분에서 신라 시대 많은 유물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912년 일제가 신작로를 내며 이미 절반이 헐려 버린 고분이었다. 한 주민이 이곳에서 집벽을 바를 흙을 파다가 우연히 유리구슬을 발견했다. 이를 지나가던 일본인 경찰이 보게 되면서 고분 발굴이 시작됐다. 3·1운동 2년 후인지라 경주 시민들은 일본인이 왕릉을 파헤친다며 분노했다.

딱 한 점밖에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

발굴은 조선총독부에서 임명한 고척조사사업 촉탁 모로가 히데오(諸鹿史郎)와 경주보통학교 교장인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 주도로 진행됐다. 이들의 발굴은 사흘 만에 종속으로 이뤄졌지만 발굴된 많은 유물들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부장 유물은 금관이였다. 금관총 이후 금령총(1924년)과 서봉총(1926년), 황남리 고분군(1934년), 천마총(1973년), 황남대총 북분(1973년)에서 금관이 잇따라 출토됐다. 1972년에는 경주 교통에서 도굴됐던 금관이 관계당국에 압수되기도 했다.

'한국 금관 최초 발견 100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광

미스터리 '고구려 금관'을 아시나요

주시 광산구 운수동에 자리한 (재)보문복지재단 동국박물관에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석실의 관(冠)부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이건용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와 '삼국시대 금관의 상징'(김대환 동국박물관장) 등 다섯 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일루루 찾은 까닭은 동국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고구려 금관'에 대한 강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동안 마한 금동관이나 신라시대 금관을 봐왔지만 '고구려 금관'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직접 두 눈으로 보고자 했다. 현존하는 금관은 모두 10점(신라 7, 가야 2, 고구려 1)이다. 개인 소장품인 '고구려 금관'은 박물관 1층 별도 공간에 전시돼 있었다. 신라금관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360도 회전대에 올려진 금관은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관테 아래 지름이 19.5cm, 높이가 15.8cm 규모로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관테에 일정 간격으로 부착된 '불꽃무늬(火絢文) 세움장식'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관테와 세움장식에는 금실을 꼬아 1원 동전만 한 크기의 액세서리(달걀장식)를 무수히 달았다. 금관 앞에는 같이 출토된 금구거리 등 금동 유물과 함께 일체 강점기 때 '고물행상'(古物行商)이라는 직함과 이름(西原用成) 및 주소가 적힌 일본인 거래자 명함이 놓여 있었다. 명함 뒷면에는 유물 출토지도 추정되는 지명(평안남도 강서군 보림면 간성리)이 붓글씨로 적혀 있다.

김대환 동국박물관장은 이날 발표한 연구 논문 '삼국시대 금관의 상징'에서 불꽃무늬 상단의 마음모퉁장식이 고구려 덕흥리 벽화 고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덕흥리 벽화고분의 조성 시기가 서기 408년

(광개토왕 18년)이므로 동반 출토 유물과 함께 이 금관의 조성 시기는 대략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비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천상계와 현실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적인 역할은 고대 왕국의 막강한 왕권의 절대 군주만이 할 수 있었고, 바로 그 상징물이 끊이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영원한 태양과도 같은 불꽃을 간직한 고구려의 불꽃무늬 금관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과거 '사슴뿔과 나뭇가지 조합'으로 해석해 왔던 신라금관의 출(出)자형 세움장식에 대해 '용의 뿔(龍角)을 형상화한 것'이라며 "신라 금관은 우리 민족의 문화 속에서 자생적으로 태어난 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신라 금관 자생설'을 내놓기도 했다.

'불꽃무늬 장식' 타오르는 태양 상징

일체강점기인 100년 전 우연히 모습을 드러낸 금관은 '타임캡슐'과도 같다. '고구려 금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물론 아직까지 고구려 금관이 정확하게 어떤 곳에서 발굴됐고 어떤 경로로 일본인 고물행상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의 소장자가 1940년대 후반에 고물행상에 금관을 인수했다는 정도만 알려졌을 뿐. 하지만 중국의 역지스러운 '동북공정'을 뒤엎고,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새로운 고구려의 역사·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은 분명하다.

한국 금관이 처음으로 발견된 지 꼭 100년. 1500여년 묻혀 있었다가 모습을 드러낸 '고구려 금관'의 자태를 이제 두 눈으로 직접 보시라.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인들의 기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이 금관은 우리가 잊어버린 고구려인들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모른다. 전시는 12월 19일까지다.

관행(慣行)

부 격차로 위화감 조성, 사복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 등의 여론이 비등해서 1986년부터 다시 교복이 부활하였다. 교복의 선택이 학교장 재량으로 들어가자 대다수 학교가 교복을 입기 시작했으며 초기 학생들의 개별 구매에 따라 업체 간의 심한 경쟁으로 고급화되면서 70만 원대의 고가 교복이 등장했다. 교육부는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5년부터 개별 구매에서 학교 주관 공동 구매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교복 검수를 위한 품질심사위원회 구성, 구입 후 교복 만족도 조사 등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은 학교 업무 중의 한 가지이다. 초창기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된 시상제도인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표창은 교복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될 모양새다.

우리 시 교육청은 관행을 벗고 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원들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매년 '학교 업무 정상화' 기치를 드높이 걸고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등 여러 시책을 시행해 왔다. '정상화'란 말은 듣는 사람에게 매우 개혁적이고 구악을 없애는 등불 같은 매력의 단어이다. 비정상적의 과거를 바로 잡아 새롭게 나아가겠다는 의미와 묶여 있다. 비정상의 늪에서 반복되는 업무에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제자리로 돌려놓는 회복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정상화'란 비정상의 현실을 전제한 대칭 개념의 단어이다.

하지만 해마다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라'고 반복해서 단위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면 정상이 아니다. 교육청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어느 한쪽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십여 년을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아

직도 일선 학교의 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해서일까. 이미 정상화되었는데 비정상으로 되돌아가 버릴까 그런 것일까. 이제껏 학교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면 무엇이야말로 감독 관청의 한계이고 그저 반복되는 구조 행정이 아닐까?

학교 업무 정상화와 연관된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도 그렇다. 담임교사는 학생들과 접촉이 가장 많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힘든 민원도 발생한다. 담임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행정 업무는 부장 교사나 비담임 교사가 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참 좋다. 그러나 교사 20~30명 규모의 학교와 50~60명의 규모의 학교 업무가 같을 수 없다. 업무 총량은 똑같다. 교사 수가 적다고 업무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담임 업무 제로화란 말은 가능하지도 않다. 담임 업무와 행정 업무의 한계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 단위 학교에서는 매년 연말이면 다음 학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별 상황에 따라 수차례 교원의 의견 수렴하고 조정하며, 주변 학교의 사례를 검토하기도 한다. 4년 재임 중 두 번 이상은 필히 담임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교사의 경력이나 목소리에 따라 업무가 치우치지 않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화' '제로화' 이런 구조적인 용어 대신에 '효율화'로 바꿔야 한다.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서 업무를 정상화하겠다면 모두가 신선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10년이 넘어도 업무를 정상화하겠다고 반복해서 공문을 내려보내면 어느 한쪽은 비정상임이 분명하다. 이쯤 되면 관행이 아니라 퇴행이다.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 계획이 관건

먼저 국내 후보 도시 선정 과정이 중요하다. 국내 유치 후보 도시 선정은 아시안게임으로 가는 1차 관문이다. 대한체육회 후보 도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 승인,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이에 따른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까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정부의 재정 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다. 대구와 광주가 힘을 합쳤고, 이미 두 차례의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양 도시인 만큼 대구시와 광주시 공무원들의 경험과 역량을 믿는다.

다만 다른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4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 시도지사가 공동 유치를 결의했지만, 유치의향서도 내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대회 유치 계획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정부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 국제행사를 승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대회 유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과오로 보인다.

46개 종목에 17개 신축 경기장을 짓고 사후 활용 문제도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선례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권고한 문화경기장을 대신하여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신축한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순수 경기시설이 아닌 웨딩시설로 임대까지 했지만, 임대료마저 내지 못해 적

자에 허덕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중요한 것은 대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40개 이상의 종합 경기대회가 치러지는 만큼 경기장 확보와 활용 계획이 중요하다. 스포츠대회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항목이 경기시설과 교통 등 인프라이기 때문에 비용면 익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현재 대구와 광주가 보유한 경기장의 상당 부분은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용으로 신축하거나 개축되었다. 광주유니버시아드는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 이후 1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대회였다. 따라서 2038년이면 대구 경기장은 35년, 광주 경기장은 23년 차에 접어들다. 현재 있는 경기시설의 마모율을 고려한 경기장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는 개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기 때문에 한 도시의 개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의사결정의 지연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공동 개최 도시 간의 합의 문제 등이다. 가.폐막식 개최지 결정, 경기 종목 개최지 분배의 문제, 선수촌 분산에 따른 운영 비용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상당하다. 대회 유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들 다양한 변수들을 잘 반영한 기본 플랜이 짜여져야 유치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이 내용이 유치 신청서의 근간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社說

끝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떠난 '역사의 죄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과오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군사 반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광주 시민을 학살해 놓고도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이 생을 마감했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들으며 허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의 죄과를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광주를 피로 물들인 대가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뒤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천억 원의 자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선고받은 추정금은 내지 않으면서 '황제골프'를 즐기고, 광주항쟁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죽을 때까지 뻔뻔한 행보를 보인 그는 모든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러니 그의 평화로운 죽음이 오히려 더욱 허망할 수밖에.

5·18 유공자 단체는 학살 책임에 대해 끝내 사죄하지 않은 전 씨에 대해 격노하며 어떠한 국가 차원의 예우도 단호히 반대하

는 뜻을 밝혔다. 오죽하면 광주시장까지 나서서 이런 논평을 냈겠는가. "역사의 죄인에게 죽음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전두환이 역사·국민에 지은 무거운 죄는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의 죄인 전두환은 90세까지 장수를 누리고 이제 저세상으로 갔다. 그가 사망함으로써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에 대한 책임은 역사의 영웅으로 넘어가게 됐다. 우리는 그의 죽음이 애석한 것이 아니라 끝내 발표명령 등 학살의 주범을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임을 잘 안다. 그리고 그가 누가 됐든 죽을 보았다는 관대해지기 마련이란 사실도 잘 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노평으로 조사(弔辭)를 대신한다. "살아서 받지 않은 찻값은 지옥에서 가서라도 받기를."

원전 주변 주민에 핵폐기물까지 떠넘겨서야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사용 후 핵연료를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하도록 한 특별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전 가동으로 40년 가까이 불안감을 안고 살아왔는데 폐연료봉까지 떠날 수는 없다는 항변이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력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우라늄·세슘 같은 맹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강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모두 여섯 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한빛원전은 지난 1986년부터 지금까지 원전 내부 물탱크에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해 왔다. 국내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폐기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빛원전에는 저장 용량의 74.2%에 달하는 6691다발의 폐연료봉이 쌓였고 오는 2029년이면 포화 상태에 달하게 된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2051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건설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유로 백지화된 뒤 더 이상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 의원 24명은 지난 9월 핵폐기물을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 시설을 마련해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임시 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 처분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최소 10만 년간 인간 생활권과 격리가 필요할 만큼 위험한 물질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원전사업자가 제때 보관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기존 원전에는 맹독성 물질이 차곡 차곡 쌓이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영구 처분장 건설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적자(嫡子)와 서자(庶子)의 구별은 중국 고대 씨족 공동체 사회에서부터 엄격했다. 종파 내부의 종족 간 엄격한 지배관계 성립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적자 가운데 가장 연장자는 적장자(嫡長子)로서 가계를 계승하는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서자들은 적장자의 종법적 권위에 복종해야 했다. 적자와 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도 큰 차이가 있었다.

최근 일부 언론에 적자(嫡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이름 앞에 주로 수식어로 사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

다'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이나 지역민들도 장 전 의원이 'DJ 적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장 전 의원도 자신이 'DJ 적자'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을 터인데도, 장 전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의 특수 게릴라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도 있다. 그러면서도 'DJ 적자'를 자처하는 것이 민망하지도 않은가.

적자(嫡子)

DJ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내 정치권에 상당수 활동 중이다. 하지만 장 전 의원처럼 'DJ 적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김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고 권력을 누리던 것이 적자인지,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그 정권을 계승하는 것이 적자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언론 또한 'DJ 적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은펜칼럼



김진구 일선중교장

'관행(慣行)'이란 말을 종종 듣는다.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고치지 않고 반복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 '적당(適當)'이란 말이 '대중, 요령껏'이란 뜻으로 변한 것과 같다. 관행대로 하면 큰 탈은 나지 않겠지만 철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으면 웃음거리로 전락한다.

연말이 되니 유공자를 표창하겠다고 추천하라는 각종 공문이 오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만 50여 건이 넘는다. 대부분 교육부에서 생산하고, 시도교육청을 경유해 단위 학교로 이첩하는 공문인데, 교육부 장관 표창이 40여 건이고 나머지는 교육감 표창이다. 남달리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공직자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일은 다다익선이다. 하지만 표창 추천 공문을 보고 교직원들이 관심을 갖기 보다는 혀를 끌끌 찬다면 우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공문이 '교복 가격 안정화 유공 장관 표창 후보자 추천'이다.

해방 이후부터 일제식 교복을 입다가 1969년 중학교가 평준화되면서 학교별 차이를 없애기 위해 획일화된 교복을 입었다. 그 후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1983년부터 교복 자율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빈

기 고



배미경 더킹핀 대표이사 호남대 초빙교수

지난 15일 2038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준비위원회가 화려한 출범식과 함께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열정을 보였다. 아시안게임 유치 도시를 결정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지난해 이래적으로 2030년 대회(카타르 도하)와 2034년 대회(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동시에 결정하면서 유치 가능한 가장 가까운 대회가 2038년 대회다. 따라서 이번 유치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17년 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된다.

2038년 대회까지는 2022년 지방선거를 포함하여 네 차례의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에서 개최 도시의 리더십 교체와 정치적 상황은 민감한 사안이다. 지금 유치에 나선 인사들이 대회 개막식장에서 화려한 개막 광파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당한 긴 시간이다.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가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다. 정부와의 충분한 교감 속에서 대회 유치가 준비될 수 있어야 하고, 17년의 시간 차를 고려한 튼튼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수진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